

‘교육 포기정책’ 불평등 심화에 전국 예비교사 팔 걸었다

전국 교대생, 동시다발 시국선언
교원감축 등 정책 후퇴에 ‘분노’
교육전문대 의견 수렴 부족 지적

전국 교육대학생들이 정부의 교육 정책 오류를 지적하며 제동을 걸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불평등을 야기하는 ‘교육 포기 정책’,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교원 감축’, 교대생도 모르게 진행된 ‘교육전문대학원 추진’ 등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일 예비 교사인 전국 교대생들이 ‘교육불평등 심화시키는 교육 포기 정책 규탄 전국 교육대학교 동시다발 시국선언’에 나섰다. 교대생들은 이날 “우리 예비교사들은 앞으로 40년간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들로서 공교육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 문제의 진단도 대책도 잘못된 정책, 경쟁이 점령한 교실을 가만히 둘 수 없다”며 교육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소속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학생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앞에서 열린 ‘교육불평등 심화 및 교육 포기 정책 규탄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부의 교육불평등 방기를 지적했다.

이날 시국선언은 각 학교 점심 시간인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됐으며 경인 교대, 광주교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서울교대 등 5개교에서는 기자회견이 함께 열렸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20일 시

국선언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전국 예비교사 분노의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김민아 교대련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고착화돼 온 교육불평등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오히려 후퇴하는 정책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교육 대학

마저도 경쟁 구도가 심해지는 현 시국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정부의 역행 정책에 저지하고자 하는 교대생들의 요구를 알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불평등 완화를 위해 학급당 교사 비율을 높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반대로 기간제 교사를 늘리고, 교원 채용을 감축하는 모습을 보여 대립각을 세웠다. 또한, 4년제 대학 중심 교사 양성체계를 6년제 대학원 체제로 개편하는 교육전문대학원을 추진하면서 교대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졸속 추진’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대 측에서도 교대의 5년제 혹은 6년제로의 확대를 주장해 왔다”며 “현재 사대는 교원 양성 기관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짧은 시간 동안 새로운 지식,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문제는 교

육부에서 충분한 관련 집단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교대생들은 교육전문대학원 추진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대련이 교대생 4186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교육부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심각한 탁상 정책 형식의 졸속 추진’, ‘단순히 정부의 실행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 ‘교육 주체간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탁상행정가들의 독단적인 주장’ 등의 반응을 보였다.

19일 임소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세대별로 살펴본 교육 인식 변화’ 보고서에도 교육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짐이 주목됐다. 연구팀은 “교육기관들이 고등교육 정책 추진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책무를 지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 완화... 증축 쉬워진다 여의도 공원, 세계적 도심 문화공간으로

대학 전체 용적률 최대 1.2배 확대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 풀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관내 대학·병원 등 공공시설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거쳐 올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먼저 시는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한다. 해당 구역에는 반도체 등 첨단학과 산·증설, 실험실·연구소 같은 산학연계 및 창업지원 시설과 평생교육시설처럼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우선 배치된다.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대학 전체의 용적률은 기존의 최대 1.2배로 확대된다. 완화 받은 용적률은 혁신성장구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오는 7월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대학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현재 중앙대·홍익대·고려대·서울시립대 등이 제도 적용을 통한



삼육서울병원 신관동 증축안. /서울시

시설 확충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시는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 조항도 없앴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안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시설은 최고 7층(28m) 이하까지만 완화 받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엔 7층 이상도 건축 가능해진다.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는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건축제한 완화 사항을 적용해 시설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조례가 시행되는 즉시 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자연경관지구 내 시설은 건폐율도 완

화된다. 시 관계자는 “높이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제한(30%)된 경관지구 특성상 부지에 여유가 있어도 수평 증축이 어려웠다”면서 “하지만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건폐율 또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로 적용이 가능해져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늘리지 않고도 증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는 작년 7월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시는 증축 수요가 있는 병원(이대목동병원·양지병원·녹색병원·강동경희대병원 등)들과 실무 협의를 거쳐 사전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jk10

오세훈,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비전 공유
제2세종문화회관, 수변 랜드마크로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을 세계적인 도심 문화공원으로 재탄생시킨다. 공원 내에는 수변 랜드마크가 될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유럽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이 18일(현지시간) 함부르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시설인 ‘엘프필하모니’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의 비전을 공유하며 이 같은 계획을 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옛 창고 건물에 철제 구조물을 올려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엘프필하모니에서 여의도공원 내 제2세종문화회관을 수변 랜드마크로 만들 방안을 모색했다.

엘프필하모니는 스위스 건축 듀오 헤르조그 앤 드 뫼롱이 1966년 지어진 낡은 카카오 창고를 열어붙은 파도의 형

상으로 리노베이션한 건축물이다. 콘서트홀 외에 호텔, 스파, 레스토랑 등을 갖추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여의도공원은 중심 지역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과 단절돼 접근성이 떨어져 도심문화공원으로의 재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는 여의도공원을 수변 국제금융 도심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도심문화공원으로 리모델링하고, 이곳에서 서울의 수변 문화 랜드마크가 될 제2세종문화회관을 지을 예정이다.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시는 올 상반기 중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의 사전 디자인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우수한 디자인을 제안받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 계획을 수립한 뒤 하반기 관련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아일랜드 투자노하우 벤치마킹

오세훈, IDA 찾아 투자유치 전략 모색

서울시는 유럽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이 16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산업개발청(IDA·Industrial Development Agency)을 찾아 서울이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투자유치 전략을 모색했다고 20일 밝혔다.

IDA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와 투자 홍보 활동 등을 위해 아일랜드 정부가 1969년 설립한 투자유치 전문기관이다. 지난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일랜드는 불과 3년 만에 이를 졸업했다.

시는 “아일랜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13.5%, 작년은 12.2%(잠정치)에 달하는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기록했다”면서 “또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은 13만1000달러(추정치)로 세계 3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12.5%의 낮은 법인세와 IDA가 주도하는 투자유치 활동이 아일랜드 경제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으로 꼽힌다. 이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 24%와 유럽연합(EU) 평균 21%의 절반 수준이다.

이날 IDA를 방문한 오 시장은 ‘서울 투자청-IDA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국의 대표적 투자유치 전담 기구인 서울투자청과 IDA는 업무 협약을 계기로 ▲투자 네트워킹 파트너십 촉진 ▲인력 및 프로그램 교류 ▲기업 정책과 우수 사례에 대한 정보교환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지역참여형 노동 협업사업 13개 선정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 확산
산재 예방사업, 노동자 심리지원 등

경기도는 ‘2023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 공모 결과 9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13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과 수요에 맞는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0년부

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

올해부터 시군도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총예산이 지난해 2억 5천만 원에서 올해 2억 8,600만 원으로 늘었으며, 지원 한도도 사업당 최대 2,500만 원에서 6,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선정된 사업은 분야별로 ▲실태조사 4건 ▲노동 상담 3건 ▲교육 및 여가 지원 3건 ▲복합(컨설팅, 교육 등)사업 3건 등이 있으며, 선정된 컨소시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감정노동자 심리지원사업, 가사 노동지원사업 등을 제안한 5개 사업이 가점을 받아, 최종 지원 대상 명단에 선정됐다.

지역 노동 현안을 반영한 사업도 눈에 띈다. 파주시는 파주시 노동희망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파주시 농업종사 외국인노동자 주거실태조사를, ‘김포시-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는 외국인노동자 대상 온라인 모국어 노동법교육에 나선다. 부천시 3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